

(사) 이주민과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193-9번지 송광빌딩 4층

☎ 051) 802-3438, Fax : 051) 803-9630

E-Mail: [noja@paran.com](mailto:noja@paran.com), homepage: <http://fwr.jinbo.net>

## 2011 상담통계로 본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 여전히 침해받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리

(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이하 인권모임)에서는 지난 2011년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정리했다.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과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모임의 2011년도 상담은 전화상담을 제외한 방문상담이 전체 518건이었다.

**이주노동자 임금성 상담은 41%로 지속적으로 감소.**

**의료, 산재, 업체/업종변경, 체류, 폭행, 신분증압류, 기숙사문제 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이동 제한, 이탈신고, 장기계약으로 인한 사용자 종속성이 이주노동자 노동권리 제약**

### ○ 유형별 상담현황

- 유형별 상담통계를 보면 임금성 상담이 214건(43.1%)으로 지난해 257건(54%)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체불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과 관련된 임금성 상담은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노동부를 방문하는 등 직접적인 해결이 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산재상담의 경우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사고성 재해가 대부분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디스크, 화학물질로 인한 호흡기계 문제, 피부질환 등 직업성 질환으로 인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상담통계>

상담내용	건수	비율(%)
임금성 (임금, 퇴직금, 수당)	214	41.3
산재	59	11.4
업체/업종변경	34	6.5
재고용	3	0.6
체류	32	6.2
폭행	19	3.7
신분증압류	13	2.5
의료	82	15.8
기숙사문제	7	1.4
기타	55	10.6
합계	518	100

---

- 업체변경 상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게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업체변경이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도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업종간의 이동도 자유롭지 않다. 업체/업종변경과 관련한 상담은 34건, 6.5%로, 지난해 81건 (17%)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였다. 이것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센터를 통하여 직접 해결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 체류상담은 비자연장이나 비자종류 변경, 단속으로 인한 보호일시해제 등과 관련된 상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 중 6.2%를 차지하고 있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 **폭행관련 상담이 소폭 증가하였다.** 폭행상담은 한국인 사업주나 관리자에 의한 폭행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동료에 의한 폭행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였으나 경찰조사 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되어 결국 강제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 인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이주민소식 창 제90호\_2011년 1월19일자 참고) 또한 2월에는 한국인 사업주에 의해 이주노동자가 폭행뿐만 아니라 납치, 감금되는 사태가 벌어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이주민소식 창 제107호\_2011년 12월 19일자 참고)

- 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인 여권과 등록증 등의 신분증압류와 통장압류 상담도 여전하다. 이것은 대부분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 해당한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신분증과 임금통장 압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장시간노동, 폭행/폭언 등의 문제를 대부분이 동시에 안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미등록으로 전락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상담이 기숙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공장안에 설치된 가건물 등의 기숙사 시설이나 인근의 자취방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공장안 기숙사의 경우 사생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난방, 온수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공장 소음과 진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숙사문제는 기존에도 똑같이, 혹은 더 열악한 상태로 있어왔지만 상담으로 새롭게 집계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이것을 개선해야할 문제로서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 **의료상담은 통역의 문제나 병원비, 적절한 병원을 알지 못해서** 인권모임에 병원동행을 문의하여 병원동행 활동가가 함께 방문한 것에 해당한다. 이것 역시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기타 상담에는 교통사고, 부당한 공제, 국민연금, 식사문제, 채권, 실종, 소송사기, 휴가, 계약, 구직, 사망 등이 포함된다.

---

## ○ 국적별 상담현황

- 2011년 상담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베트남 노동자들의 상담이었다. 140건(27%)으로 지난해 97건 (21.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상담소의 이주노동자 상담은 통역가 능한 사람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 상담비중이 크게 달라

지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 왔다. 인권모임은 베트남출신 활동가가 상근하고, 베트남어 통역을 전담하는 이주민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베트남노동자 상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부산 경남지역에 베트남노동자가 비교적 많고, 매주 일요일 한글교실을 통해 베트남노동자들과 상시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기에 비교적 인권모임 상담실에 접근하기 쉬웠던 것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 필리핀(19%), 중국(13.7%), 방글라데시(10.2%), 스리랑카(7.9%) 노동자들의 상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국적별 상담통계는 국적별 체류자수에

따라, 각국 공동체의 활성화 정도나 이주민 활동가들의 역할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적별 상담통계>

국적	건수	비율(%)
베트남	140	27.0
필리핀	98	19.0
중국	71	13.7
방글라데시	53	10.2
스리랑카	41	7.9
파키스탄	38	7.3
우즈베키스탄	25	4.8
네팔	17	3.3
미얀마	14	2.7
인도네시아	14	2.7
기타	7	1.4
총합계	518	100

## ○ 성별 상담현황

- 남성노동자 상담이 87.1%였고, 여성노동자가 12.9%를 차지했다. 한국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많은 수는 중국동포로 서비스업종에 근무하고, 일부는 E-6(예술홍행)비자로 공연산업에서 일하지만 인권모임에서 이들의 상담비중은 극히 낮다. 인권모임을 방문하는 여성들의 상담 대부분은 제조업 노동자이거나 단순 의료상담을 하는 경우이다.

## ○ 체류자격별 상담현황

- 미등록 이주노동자 상담이 130건(사람수), 32.8%로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체류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상담 대부분은 제조업 종사자이나 일부는 농업, 어업, 채로수집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고용허가제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이 전체로서는 크지 않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하였다. 고용허가제 어업노동자들은 바닷물에 의한 피부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고, 제조업이나 농업으로의 업종변경을 원하

<체류자격별(2011년) 상담통계>

체류자격	사람수	비율(%)
E-9	224	56.6
E-10	7	1.8
G-1	10	2.5
F-2	5	1.3
미등록	130	32.8
기타	13	3.3
미기재	7	1.7
총합계	396	100

지만 이것이 금지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이 많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 선원(E-10)상담이 증가하였다. 상담 온 이주노동자들 중 선원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25명(7.4%)이었으나, 상담당시 선원비자 소지자는 7명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미등록으로 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업종별 상담현황

- 상담 온 이주노동자의 압도적 다수인 237명, 84%가 제조업에 근무했다. 그 외 어업(양식업, 수산업 포함), 건설업, 조선업,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했다.

#### ○ 근무형태별 상담현황

-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간근무가 124명(62.6%)이었고, 주야맞교대는 65건(32.9%)이었다. 과거에 비해 주야맞교대 근무비중이 약간씩 줄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주야맞교대, 야간근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심야노동으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 지역별 상담현황

- 인권모임의 상담 중 부산지역 상담(사업장 기준)은 40.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산지역 상담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온 것으로 추측한다. 부산지역 상담 중에서 녹산공단을 포함한 강서구 지역 상담은 33.9%를 차지한다.

- 경남지역 상담이 97건, 36.2%로 비중이 매우 높는데, 그중에서도 김해상담은 49건, 18.3%이고, 경남지역에서만 보면 50.5%를 차지한다. 경남지역 상담 중에서 기존에도 상담의뢰가 많던 지역인 김해, 양산, 창원은 감소하고, 대신 거제, 통영, 고성 등지의 남해지역 상담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제주와 같은 영남권(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이외 지역의 상담도 15%나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인권모임의 지난 한해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살펴보았다. 상담통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 **노동부 등 정부기관 통역시스템 구축해야**

임금성 상담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에 대한 체불은 여

전히 많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노동권 침해 사항이다.

임금성 상담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 스스로 관계기관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나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정부기관들은 적절한 통역시스템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요구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주노동자들이 홀로 관계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본인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요건 완화, 장기적으로 사업장이동제한 완전폐지**

사업장변경과 업종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은 매우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인 사유를 들어 이에 해당하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결국 참고 일하거나 미등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게다가 노동부 고용센터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위해 방문하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회사에 가서 사업주 허락을 받아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센터 직권으로 업체변경이 가능한 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용자 종속성과 강제노동을 부추기는 사업장 제한규정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 **산재사고 빈발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 필요**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설비가 있는데도 빠른 작업을 위해 멈추게 하여 절단, 협착, 추락 등 후진적인 산재사고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산재사고 빈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고, 안전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잘려나가는 손가락들을 보며 이주노동자들은 “무서워서 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화학약품 취급 등 유해한 환경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과 보호구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화학약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법적기준을 계속해서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고용 중단 조치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이주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이주노동자 폭행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실**

사업장내 폭행사건은 대부분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업장 내 이주노동자의 종속적인 지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대개 가해자는 출국시켜버린다는 말 등으로 협박), 이는 폭행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문제제기 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미등록 신분인 경우인 경우 더욱 심각하지만, 고용허가제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장변경 제한, 이탈신고 등의 제약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폭행 피해자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치료와 보호 속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폭행피해를 당해도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본인이 추방당하기 때문에 폭행당하고도 상담센터를 찾지 않고 참고만 있는 경우가 많다.

### **사각지대에 있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급선무**

상담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노동 뿐만 아니라, 신분증 압류와 은행통장 압류, 그리고 폭행 등 가혹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선원의 특성상 고립된 선상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선원이주노동자들은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선상에서 문제가 생겨도 즉각적으로 제기할 수가 없어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선원 관리업체의 횡포로 이러한 인권침해와 노동권 침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 **노동과 휴식,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

약 35%의 이주노동자들이 주야맞교대나 야간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생체리듬에 심각한 무리를 주는 것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게다가 다수가 기숙사나 회사가 제공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지만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시설인 경우가 많다.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 적용돼야**

의료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늘 심각한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이다. 이것은 비단 성인 노동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병원을 이용하고자 해도 안정적인 통역자가 확보되지 않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의 판단도 이해할 수 없어 특히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환자는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료통역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상담실장 김그루 051-802-3438 / 010-5181-3438)

---

**(사)이주민과 함께**

---